

민주-통합신당 오늘 합당 선언

‘배제론’ 후퇴... 汎與 대통합 새국면

우리당 탈당과 가세편 의석수 50~60석 3개 정파 재편... 후보 단일화 등 모색할 듯

3일 민주당과 통합신당이 지난했던 두 달 동안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신설 정당인 '통합민주당' 창당에 합의함에 따라 범여권의 통합 움직임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의 통합으로 인해 범여권 대통합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추후 대선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 및 후보 연합 과정 등 합종연횡은 계속 진행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 "양측의 소통합은 새로운 기동권 세력이 탄생했음을 의미한다"며 "범여권 기존 세력의 지분 관계도 복잡하데 통합민주당까지 나선 게 됨에 따라 대통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의 물꼬를 텅다는 점에서 범여권의 정치적 역학 구도는 당분간 통합 민주당에 기울 전망이다.

을 중심으로 한 통합민주당이 이달과 4~5명이 합류한다면 조만간 40석은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일부 열린우리당 탈당파들이 가세한다면 통합민주당의 의석수는 이달 내에 50석~60석을 넘나들면서 범여권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동영 전 의장 등이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함께 합류한다면 통합민주당은 범여권 제세력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정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력 배제론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점에서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서는 열린우리당에 잔류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통합민주당 합류 가능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민주당이 실질적으로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총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범여권의 세력 구도는 크게 신설 정당인 통합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와 제3지대에 모이는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 열린우리당 사수파 등 3개 정파로 나뉠 전망이다. 각각 30~40석의 의석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정파는 추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기동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다수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동영 전 의장 등 대권 주자들의 계산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범여권 대통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중도개혁통합신당 김한길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통합협상 막판 조율을 위해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6월 이후 각 제정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앞다투어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서게 된다면 사실상 범여권 대통합이 물 건너가면서 범여권은 결국 대선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나 후보 연합을 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대통합의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리 낙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

광주시 '돈 먹는 도로' 운영권 회수 가능할까

‘공익처분’ 취소소송 승리 장담속 법정 가기전 정부 중재 나설수도

‘돈 먹는 도로’로 전락한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의 관리 운영권 회수는 가능할까? 광주시는 “오는 14일 광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순환도로 3-1구간(효덕IC~용암IC 2.5km)에 대한 사업자 지정취소와 관리운영권 회수를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며 “수차례 수정안을 내며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민간투자법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운영권 회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반면 투자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는 합법적 협약을 파할 이유가 없다며 공익처분을 하면 무효소송과 가처분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투자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와의 재협상 결렬을 선언한 데 이어, 발빠르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심의위원회에서 관리운영권 회수 등을 골자로 하는 ‘공익처분’안이 가결되면, 시는 곧바로 청문을 거쳐 운영권 회수에 나서게 된다.

◇중재 가능성 아직 있어=시가 예상하는 관리운영권 회수 시기는 오는 8월, 처분과 동시에 관리권은 광주시로 넘어온다. 이 경우 투자사는 운영권 신청을 동시에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전문가들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운영권 회수로 인한 투자사의 손해를 사후에라도 보전해줄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권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만 남게 된다는 얘기다. 소송 수행 소요기간은 최소 2년. 시는 이 기간 동안 도로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초장급 압박에 소송도 불사=국가인도 하락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데도, 광주시가 과거에 외국계 투자자와 맺은 민자협약의 불리한 조건을 바꾸려고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는 절박감 때문이다.

한편, 광주시와 맥쿼리측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외자유치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미묘해졌다. 기획예산처는 광주시의 이번 처분이 국가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자체의 절박한 처분 때문에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 앞서 정부가 나서 중재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현재의 추세로 보면 잔여 운영기간에 광주시가 보전해줘야 할 적자액은 1구간(두암IC~소태IC 4.2km·21년)은 7천810억 원, 3-1구간(27년)은 6천580억원으로 무려 1조4천390억원에 이른다. 반면 3-1구간의 경우 지난해 협약당시 예상 통행량의 39.7%, 예상 수입액의 37.0%에 머물렀다. 고재유 시장 재입 당시인 지난 2001년 6월 협약하면서 광주시가 인구와 차량증가를 제대로 추산하지 못해 생긴 결과다. 송인중 시장 재입 당시인 지난 1997년 협약 체결된 1구간도 마찬가지 사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협약 당시에는 9.42%의 높은 이자율이 반영됐으나 현재는 대출금리가 5.5%의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汎與 대선주자들 ‘선택의 기로’

재편 본격화... 손학규·정동영·김근태·천정배 고민

범여권 일부 세력이 통합의 성과를 내는 등 범여권 세력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 열린우리당 정동영·김근태 전 의장,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 등 대선 예비주자 4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리당 등 3대 세력의 정립(鼎立) 구도로 향해가면서 대선 예비주자들도 선택의 기로에 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범여권 제 정파의 움직임을 관망하면서 독자세력화를 추진하는 행보를 걸을 것으로 보이며, 정동영·김근태 전 의장은 제3지대 신당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으며, 천정배 의원은 시민사회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범여권 내 선두주자인 손 전 지사는 오는 17일 기반조직인 선진평화연대의 출범식을 계기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신호탄을 울린 뒤, 열린우리당의 개혁성향의 원들을 개별적으로 흡수해 힘을 길러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평화연대는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CEO, 학자, 법조인, 예술인 등 1천여명 안팎의 비정치 성향의 인사들이 추진위원을 맡고, 3만명 규모의 발기인에는 현실 정치인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비대권 시한인 오는 14일까지 지켜보되 시한을 넘긴 뒤에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으면 탈당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태 전 의장의 행보도 기본 틀에 있어서 정 전 의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 지도부의 대통합 추진 작업을 지원하되, 14일까지 성과가 없으면 탈당을 결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천정배 의원은 시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보를 가져가기로 했다. 한편, 이화천·한명숙 전 총리 등 친노성향 대선 예비주자들 등은 범여권 세력 재편 과정에서 대통합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열린우리당에 남아 내부를 다지고 다른 정파와의 세 대결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불가리아, 여수박람회 지지”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인근 안도라 상대 유치 외교

불가리아를 방문중인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이 불가리아 최고위인사들을 만나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총리실이 3일 밝혔다. 임 실장은 단장으로서 하는 여수박람회 유치사절단은 지난해 31일부터 2일까지 게오르기 파르바노프 대통령, 세르게이 스타니셰프 총리 등 불가리아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대한 지지를 적극 요청했다. 임 실장은 파르바노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불가리아의 유럽연합(EU) 가입과 정치적 안정 등을 축하하고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하는 노후면 대담회의 진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파르바노프 대통령은 “여수박람회에 대한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열망, 여수세계박람회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했다”고 말해 한국 지지를 긍정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불가리아는 당초 모로코를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불가리아 방문에 이어 인근 국가인 안도라로 이동, 메리첼 마테우 외교장관 및 안토니오 뿌이델리보 환경장관 등과 만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

Large advertisement for '하나투어' (Hanatu) travel agency. It features various travel packag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stinations like Japan, Europe, and Southeast Asia.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1588-1134 and website details.